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 저성장 시대 핵심 성장엔진인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
- K-NIBRT, K-BIO 트레이닝 센터 등 실습시설 구축, 대학·민간의 실습 지원 -
- 의료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인재 육성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6일(목)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인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전략을 구체화하였다.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23.2)의 후속조치

-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한다.

\*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21년) : ▲(제약) 1.7% ▲(의료기기) 1.8%(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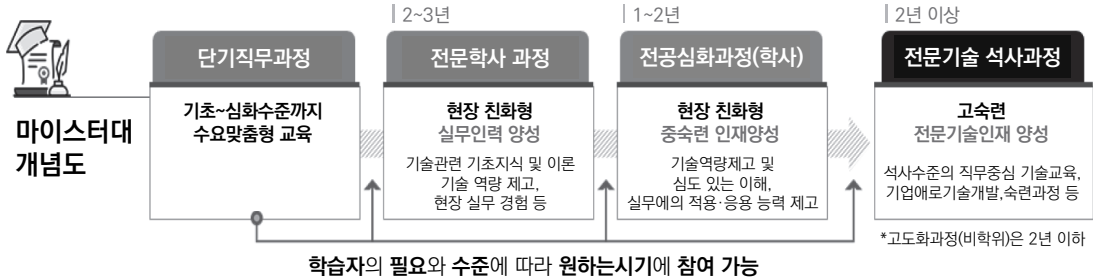
■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3년, 2개교·6개 학과)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융복합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혁신융합대학\*\* 등 융복합 교육도 제공한다.

\* (공공) K-NIBR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既 구축된 공공 실습시설 활용(복지부·교육부)  
(민간) 직업계고와 우수 민간기업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연계 年100시간 교육 제공(고용부)

\*\*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첨단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 등이 참여하여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

■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22년 5 → '23년 8개)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23년 충북 → '24년 충북 + 강원지구) 구축 등 학교 교육의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생산·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sup>가칭</sup> 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세계적인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 공정과 유사 규모 GMP 교육장 내 실습 중심 학위과정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위해 취업준비생·재직자 대상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실무실습 교육 운영

### 〈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 구축사업 〉

K-NIBRT(복지부·산업부)	GMP 수준 바이오공정 시설 구축, 年2천명 양성('25~)
가칭 K-BIO 트레이닝 센터(복지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시설 구축, 年1.2천명 양성('25~)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복지부)	합성·천연물 의약품 GMP 교육시설 구축, 年1.2천명 양성('26~)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산업부)	백신에 특화된 전문 실습시설 구축, 年0.6천명 양성('25~)

- 또한,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생산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전문인재 양성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 근거 법률 마련과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 확대 등 기반도 강화한다.

\* (의약품) ▲ 전주기 전문성 강화(식약처) ▲ 백신 인허가(식약처) ▲ 임상시험(복지부) 등 (의료기기) ▲ 교육-자격-채용 연계 교육(식약처) ▲ 해외 임상시험 전문가(산업부) 등

- 아울러, 글로벌 규제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한 산업별 역량강화 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도 지원한다.

### 〈 산업별 주요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

화장품	중국의 원료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에 대응,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 교육 제공(복지부)
의약품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교육(식약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식약처)

3

###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인재 육성

-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 (AI) ▲ 의대-공대-병원 융합 교육과정(복지부) ▲ AI 활용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복지부) (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규레이션 및 분석 전문가 양성(과기부)

-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을 통해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 의사과학자 경력·단계별 양성체계(안) 〉

(학부) 연구 관심 제고	(석박사) 연구역량 강화	(졸업 후) 경력경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대생 의과학 연구지원</li> <li>•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의 연구기회 제공</li> <li>• 전일제 박사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단계별 연구지원</li> <li>• 국내 부족기술 해외연수</li> <li>•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li> </ul>

**4**      **튼튼한 지원체계 구축**

-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 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sup>가칭</sup>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정책연구 등 중장기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 ▲ (오송)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21~'24년)  
 ▲ (대구)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23~'25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하며, “바이오헬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인만큼, 산업현장과 교육계 등과 소통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383. 보건산업정책과, 2023. 04. 06.

## II

###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10. ~ 5. 22.) -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안 제 29조제3항제4호, 별표 8의3 제1호카목)
  -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1 제3호가목1)다))
  - 셋째,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2 제1호라목)
    - \*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
  - 넷째,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약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약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 제35조의5제2항)
  - 다섯째,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별표 8 제3호나목5), 별표 9

제2호바목3)나)(2))

\*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용(2023. 1. 1. 시행)

- 보건복지부 배급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 전화: (044) 202-3551, 3555, FAX : (044) 202-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392. 보육정책과. 2023. 04. 09.

### III

#### 자립준비청년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 기업, 대학 등 민간에서 참여 가능한 자립지원 활동 방법 및 우수사례 수록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업, 대학 등 민간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활동 방법, 우수사례 등을 담은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자립지원 활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장학금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중 민간협력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안내·자문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우수한 민간 자원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 올해 처음 발간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자립지원 활동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정부의 주요 자립지원 정책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 2부에서는 자립지원 활동을 하려는 기업, 대학 등이 자문을 구하거나 대상자 모집·홍보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분야의 자립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소개를 수록하였다.
-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경제, 의료, 심리, 주거, 취업 등 주요 자립지원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활동방법과 우수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개인, 기업, 대학 등 주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 활동방법도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2023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자료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mohw.go.kr)와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대표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이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416. 아동권리과. 2023. 04. 18.

## IV

###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24) -
-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

-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가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별표 2 제3호)

■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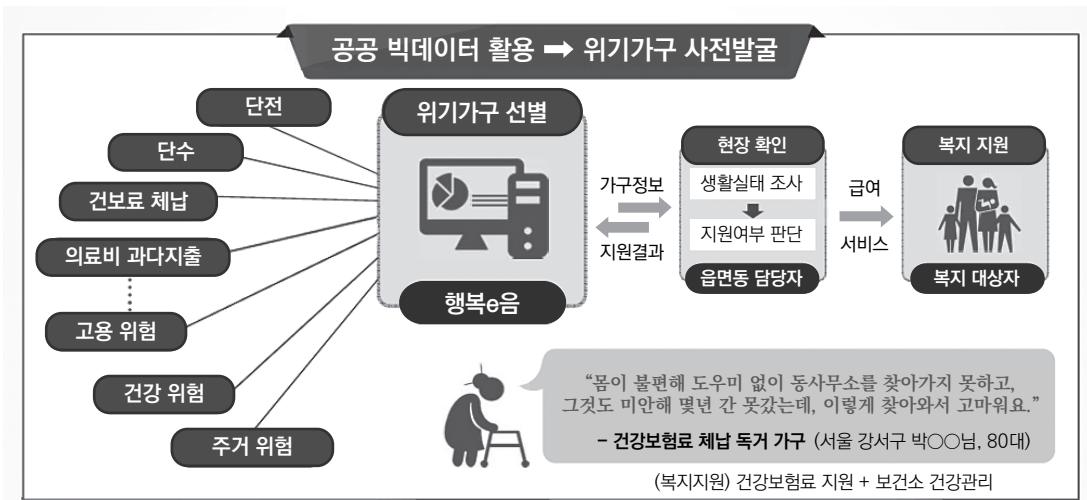
**참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발굴시스템 개요

- (경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15.12~)
- (운영방식)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위기징후 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월~)
  - \* 회차별(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을 지자체에서 조사
  - \*\* ‘21년 1월부터 기수급자 명단 포함하여 지자체 제공
-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9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3.4월 현재)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sup>1)</sup>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sup>2)</sup>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sup>3)</su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 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		

\* ('22, 34종 → 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12, 39종 → 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 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435, 급여기준과, 2023. 04. 24.